

종합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손익은

美 요구 대부분 수용 "현찰 주고 어음 받았다"

복제약 특허 허가 18개월 연장 업계 승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사실상 미국 측의 수정 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타결됐다.

우리 측도 노동·환경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일반분쟁해결절차의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의 유예,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협조 약속을 얻어냈지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추가협상의 반대급부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

오고 있다. <美 요구 대부분 반영>=정부가 밝힌 추가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 측이 수정 제의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행정부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냈다. 특히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로 국내 제약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던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도록 해 국내 제약 업체들이 일단 여유를 갖게 됐다.

"F1 경주장 부지 사용 우선 승인을"

특별법 6월국회 처리 지연 따라

F1 특별법(포플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전남도의 'F1 경주장 부지(간척지) 우선 사용'요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승인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F1 특별법에 대한 심의가 무산됐다.

전병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이날 "다음달 2일이라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야간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 3일 폐회되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F1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남도의 'F1 경주장 부지(간척지) 우선 사용'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2009년 12월까지 F1 경주장 건설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F1 경주장이 들어설 영산강 간척지에 대한 전남도의 우선 사용 요구를 승인,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헬기잡는 장갑차 K21 '화력 시연'

적의 헬기와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K21)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 완료됐다.

적의 헬기와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K21)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 완료됐다. 29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홍시험장에서 열린 'K21 차기보병전투장갑차 개발완료 보고회'에서 장갑차가 화력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연금법·사학법·로스쿨법 타결

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재개정,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견이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용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학교운영위 추천 6대 이사회 추천 5)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선화는 사학법을 조기에 재개정하라는 종교계와 사학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선의 재개정안이더라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표명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히 미합의 쟁점을 마무리해 6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과 사실상 연계돼 있던 로스쿨법 처리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맡겨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

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대로 내고 덜 받는다'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지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들 3대 법안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 과테말라행

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 지원 연설

노무현 대통령이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총력태세에 들어간다.

노 대통령은 내달 4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를 결정하는 제119차 I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과테말라로 향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유치위원, 취재진 등 대규모로 구성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본진이 29일 오후 과테말라 현지로 떠나는 데 이어 노 대통령이 최후의 결전장으로 향함으로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입체적인 유치활동에 들어선 모양새다.

노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후보도시 결정순간까지 과테말라에 머무르며 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는 등 IOC 위원들을 상대로 정상차원의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쳐나간다.

특히 경쟁국 정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프레드 구젠바워 오스트리아 총리가 과테말라를 찾는다

시설

정치권 이해다툼에 발목 잡힌 F1특별법

J프로젝트 선도시업으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플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을 위한 'F1 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F1 특별법의 무산으로 오는 7월 경주장 착공 등 F1 대회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F1 특별법의 처리 무산은 소위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자리다툼과 대선 선을 앞두고 벌이는 기 싸움이 원인이었다.

로 전남지역 최대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었다면 F1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교체 문제를 논의해야 했다.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2009년 12월까지 경주장 건설을 마쳐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

국회는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현안 및 민생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서는 안 된다.

경북도의회 광주체전 '참가' 결단 환영한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광주 전국체전 참가 및 훈련비 5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한다.

경북도체육회 대표단도 지난 26일 광주를 방문, 광주시체육회를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체전 불참 사태가 있어선 안 된다"며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체전 불참은 심각한 문제다. 시·도의회가 지역발전과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해선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수습한 것은 매우 칭찬할 일이다.

에게 사상 초유의 전국체전 불참이 불러와 파장을 우려하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수습한 것은 매우 칭찬할 일이다.

경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수습한 것은 매우 칭찬할 일이다.

참여객기 참사...북한 현지민도 조문

희생자 시신 오늘 국내 도착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의 한국인 희생자 분향소가 차려진 프놈펜 갈랫병원에 프놈펜에서 식사를 운영하는 북한 관계자들도 조문을 와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주었다.

북한 정부가 직영하는 평양광명면의 하대식 지배인과 여직원 2명은 28일 밤 분향소를 찾아와 조화(시진)를 증정한 뒤 조문했다.

한편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관광객 13명의 시신은 29일 밤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한국으로 향해 30일 오전 6시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광주세무서장 박희홍

북광주세무서장 김주현

서광주세무서장 공기수

광주국제세정 인사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7월 2일자로 광주·전남·북 지역 11개 세무서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세무서장은 박희홍 나주세무서장이, 북광주세무서장은 김주현 서광주세무서장, 서광주세무서장은 공기수 목포세무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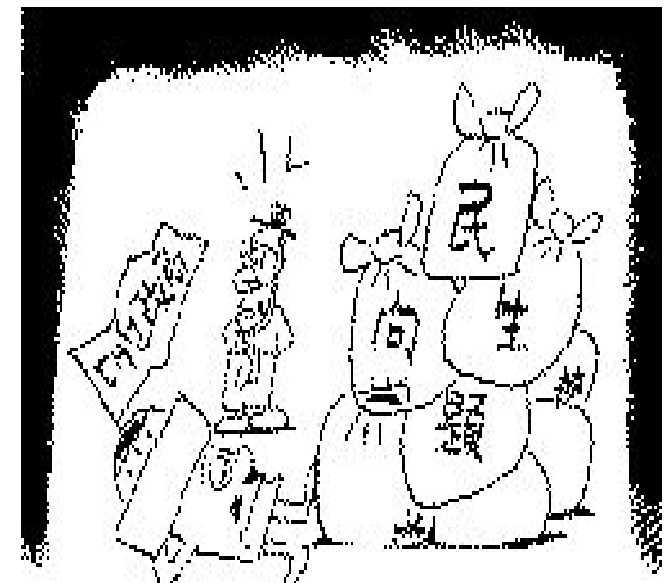
전남·북지역 세무서장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

빛日만평

- 김중두



평소 높고...대선이라 또 높고...

"통합민주당이 대통합 나서자"

박광태 시장·박준영 지사 등

내일 광주서 '8인 회동' 갖기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김효석·이낙연·신중식·채일병 의원, 김영진 광주시장위원장, 장성원 전북도당위원장이 다음달 1일 광주에서 '8인 회동'을 갖고 통합민주당이 범여권 대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통합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광주·전남의 민심과 대선 정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통합민주당이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중도 세력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통합민주당에 합류한 중도개혁통합신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대통합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대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에 대선주자 연설회의 참여 검토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통합에 나설 것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전자 재조합, 에이즈 완치 가능"

에이즈 완치가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됐다.

독일 막스 플랑크 분자세포생물학·유전학연구소의 인드라니 사르카르 박사는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 최신호(6월29일자)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CRE재조합 효소를 유전자조합해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면역세포에 주입한 DNA를 인식해 없애버리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